



한 용 교
한국포장협회 회장

현실에 적합한 포장정책 마련되어야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된 필름·연포장 업계는 요사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도돼 포장업계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와 매스컴이 포장재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무조건적으로 포장재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플라스틱 및 포장업계의 불만과 반발을 사고 있다.

물론 쓰레기종량제가 마구 버려지던 재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다시 활용하게 하고 폐기쓰레기의 감량화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보다 가까워진다는 취지는 무척이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잘못 인식된 폐기물에 대한 상식으로 포장업계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은 포장과 가장 가깝고 식품포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무차별적인 적대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포장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나쁜 인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론 장바구니 사용, 리필제품 사용 등 건전한 쪽의 홍보는 정부나 국민, 자라나는 2세에 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던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문제점이 원래 PVC 염소이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체 플라스틱으로 통칭되면서 플라스틱은 재생도 재활용도 되지 않는 포장재로 사실화 되어졌다. 사실 플라스틱은 종이보다도 더 환경친화적이고 유용하며, 효과적이고 값있는 포장재이며 재활용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커지는 물질이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포장업계 각 분야에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주로 분해성 필름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고 관심이 높으며, 환경친화적인 코팅기술이나 수성잉크의 개발을 서두르는 등 업계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된 특성 때문에 개발비용 투자나 전문 기능인력 확보가 어려운 형편에다 만족할 만한 결과물은 아직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 산·학·연 공동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렇듯 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부는 이미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호)을 발표하고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계획에 의거, 컵라면 용기 등 1회용기는 96년 6월30일까지 100% 감량한다는 지침을 밝혀 실제로 1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선 ▲ 사용할만한 대체 용기가 없고 ▲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소비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 플라스틱의 식품 보관성, 위생성,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플라스틱 포장재의 특성을 잘못 인식한 것으로 포장재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제품의 장점을 살리는 등 새로운 대체재를 찾기 보다는 사용 용기의 회수 및 응용 등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부령 제14호 중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95년 2월 6일 1차개정)중 제4조에서 2항과 관련하여 제품의 종류에 따른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치수 등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포장공정에서의 기존 포장라인 중 포장기계를 전면 개편하는 문제와 제품의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현실감에 맞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플라스틱 포장재에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여론 및 제도의 보완이 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연포장업체가 당면한 문제는 오는 97년부터 시행 예정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인쇄시설에 있어 수성잉크 사용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라비아 인쇄에 있어 수성잉크의 적용은 아직 일본에서도 연구단계에 있어 완전 실용화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며, 수성잉크를 이용한 인쇄시험 결과 생산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인쇄동판의 전면교체 등 현 시설 일부의 개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연구검토 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바이다.

그간 정부는 포장관련법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있어 예기될 문제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정책을 실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재활용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법 시행에 있어 약간의 뼈저거림도 감수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작정 규제하기 보다는 재활용 계획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